

효과적 소상공인 지원책… 男 “백신패스 해제” 女 “稅 완화”

[시장경제신문 창간 10주년 여론조사]
소상공인 지원 정책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1위 백신패스·영업시간 규제 해제 21.6%
남성은 ‘방역규제 해제’, 여성은 ‘세금 완화’
20·30·50대 방역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 맞아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백신패스·영업시간 등 규제 해제(21.6%)’를 꼽았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이어 △각종 세금부담 완화(19.2%)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16.4%)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제한(13.4%) △대출·보증 등 자금지원 확대(12.8%)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지원(11.5%) △잘 모르겠다(5.6%) 순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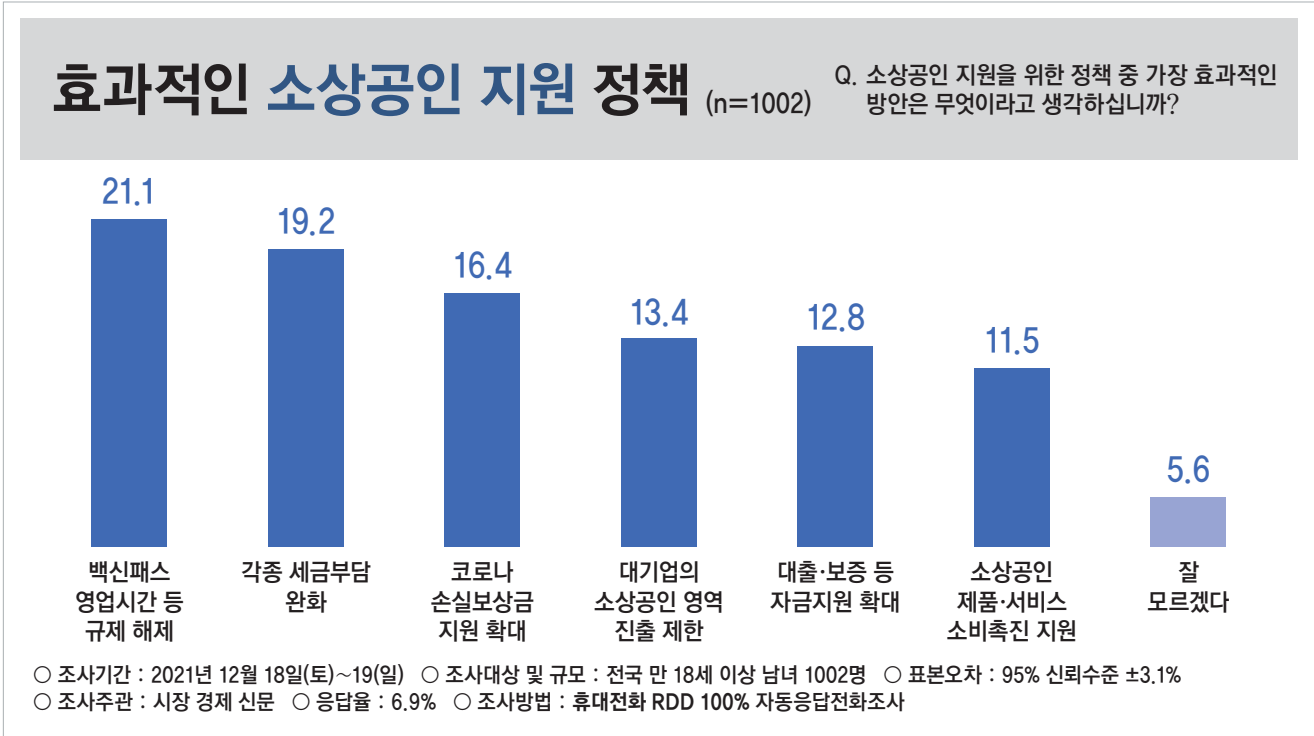
이 중 영업시간 제한 완화, 코로나 손실 보상, 자금 지원 확대 요구는 사실상

코로나 장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답변으로, 총 50.3%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각종 세금부담 완화와 대기업 진출 제한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항목들도 총 32.6%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전통적인 요구들이 다시 메인 이슈로 부상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3.1%)과 경기·인천(22.7%) 지역의 응답자들이 방역 패스와 거리두기 제한의 완화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1순위로 꼽았다. 대구·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규제 완화보다 각종 세금부담 완화(23.2%)를 요구한 수치가 1%가량 높았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19.3%), 거리두기 완화(15.5%)를 꼽아 타 지역과 온도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방역 규제 완



사진=시장경제DB

화(24.4%),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16.8%) 순으로 답한 반면 여성들은 세금 부담 완화(23.2%), 방역 규제 완화(17.8%)를 택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에서 20세 응답자들이 방역 규제 완화(29.0%)를 요구했다. 30대(26.1%)와 50대(20.1%) 역시 방역 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지만 그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40대

(23.1%)와 70대 이상(25.2%)은 각종 세금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60대(22.6%)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당지지층으로 구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22.8%), 대기업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15.9%) 순으로 답했다. 반면 국

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방역 규제 완화(26.2%), 각종 세금 부담 완화(22.9%) 순으로 답해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23.2%),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지원(16.0%) 순으로 답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방역 규

제 완화(27.1%), 각종 세금 부담 완화(23.3%)를 원했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후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목한 응답자들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전자는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확대(21.8%), 소상공인 소비촉진 지원(15.4%) 순이었고 후자는 방역 규제 완화(25.8%), 각종 세금부담 완화(21.8%) 순으로 답했다.

이 외에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지목한 응답자들은 방역 규제 완화(25.7%)를 1순위로 지목했고,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각종 세금부담 완화(22.5%)를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이다. 응답율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조사 완료 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연령·성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기사 2, 3면]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兆, 현실화 시켜야”

오세희 신임 회장 취임식서 정부 작심 비판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안 조속 마련 거듭 촉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역설
이준석 대표 “국가의 보상, 충분히 이뤄져야”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신임회장이 취임사에서 정부에 손실보상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근 방역당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8월31일 정기총회를 갖고 오 회장을 신임 선출했다.

오 회장 취임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렸다. 취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간 활성화 성과도 보고했다.

오 회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 748

조원에서 올해 9월 900조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동안 150조원의 대출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선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손실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 100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 못지 않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의 ESG 상생경영은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오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붕괴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과 화관 건립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완전한 일상 회복,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재도약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시 등 국가재난시 국가는 민간자원을 징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난시 국민들은 국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진 기자 amy311@meconomynews.com

“우리 쌀 지키자”… 분노한 농민들, 청와대 앞 시위

350여명 조합장 상경해 투쟁

농협마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는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종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2021년 쌀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조합장 총결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위에는 협의회 회원 140명을 비롯해 350여명의 조합장이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신곡수요예상량 감안 시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됐다.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초과할 경우 과잉생산물량의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현재 쌀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 결기대회에 참여한 350여명의 조합장들은 농민의례를 시작으로 농민가 제창, 결의문 낭독, 손피켓 시위, 요구사항 전달 후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은 “농업·농촌의 근본이자 식량안보의 굳건한 첨병인 쌀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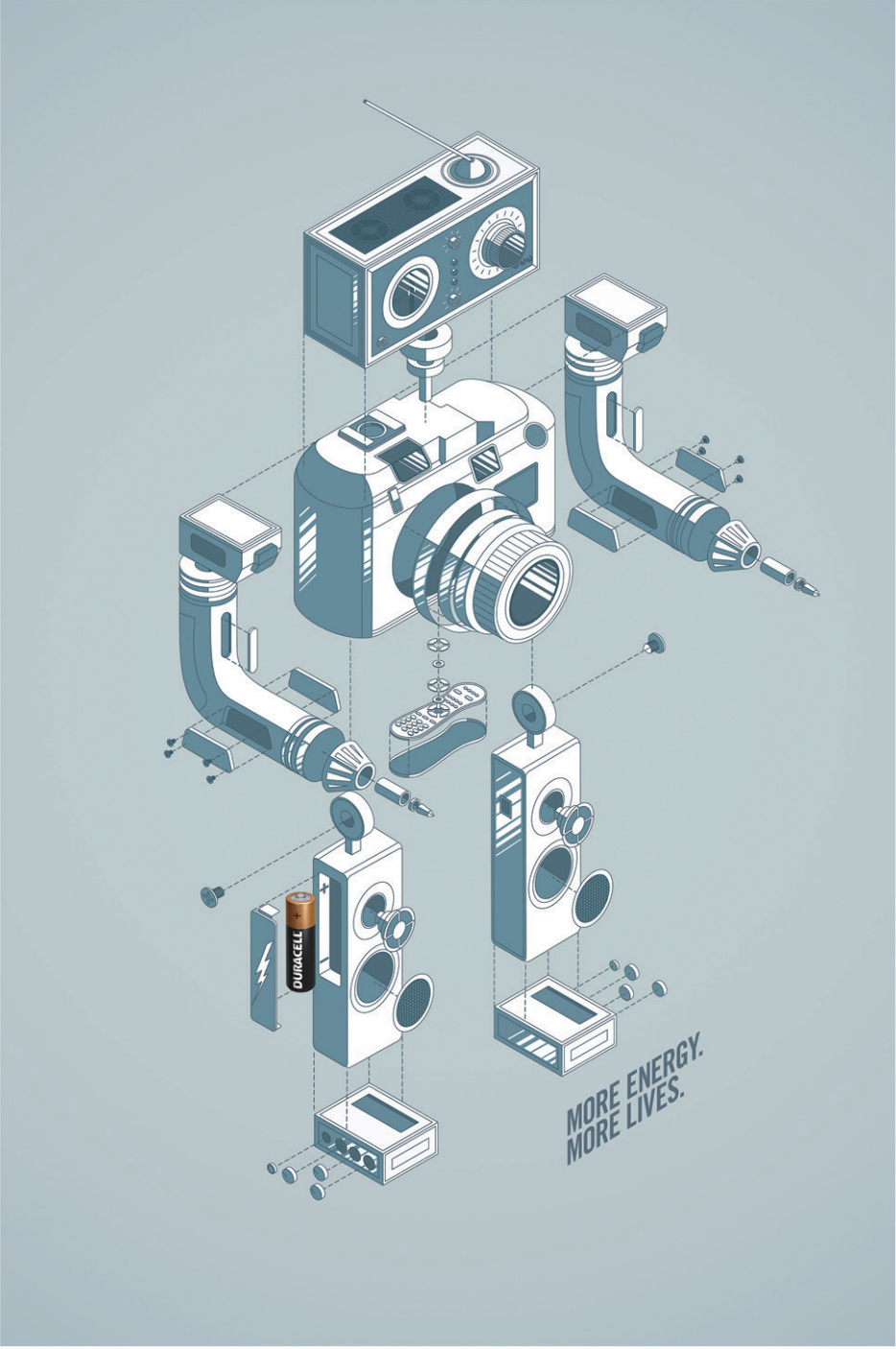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 농협 조합장 총결기대회에 350여명의 농민들이 투쟁사를 외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높였다. 이어 “지난 6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Robot

Client: Duracell

Agency: PUBLICIS LIMA

로봇

듀라셀

퍼블리시스 리마